

월/요/광/장

박석두



빅터 프랭클(Viktor Frankl : 1905~1997)은 오스트리아의 세계적인 심리학자다. 그는 1942~45년에 유대인수용소를 전전하다 전 가족을 잃고 살아남아 '죽음의 수용소에서'란 책을 쓰고 로고セラ피(logotherapy : 의미치료)라는 심리치료 이론을 창시했다.

책에는 겪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잔혹과 고통이 지배하는 상황과 그 속에서의 행동양식이 기록되어 있다. 폭력과 협박에도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는 것은 물론 일러 나가는 것도 거부하고 막사에 남아 똥, 오줌에 절은 짚더미에 누워 플래 담배를 피우는 체념자들, 간수들과 짜고 밀반입한 물건을 팔아 돈벌이에 열중하는 무리들, 안력과 간교로써 수용자들 사이에서 지배자로 군림하는 자와 추종자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남을 대신하여 먼저 죽음을 선택하는 신부, 자신은 굶주려 죽어 가면서도 배급된 빵을 남에게 주는 이도 있고, 도둑을 신고하는 대신 모든 수용자들이 한 개의 식사를 포기하는 사건도 벌어진다.

이런 다양한 행동양식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 프랭클은 이로부터 '의미에 의지'라는 개념을 끌어냈다. 삶의 의미를 잃으면 절망하게 되고 죽음을 맞게 되지만 의미를 놓지 않으면 삶을 유지한다는 것, 그리고 삶의 의미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되어 다양하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극 속에서 낙관을 유지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인데, 그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은 죽음의 수용소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위기라고 하는 게 진실이다. 농산물의 수입은 늘고 생산비는 치솟는데 판매가격은 떨어져 소득은 커녕 팔기도 어려운 일이 다반사다. 농업·농촌·농가 인구가 줄어 마을이 비어지면서 노인들만 늘고 있다. 몇 남지 않은 농촌의 젊은 층 가운데 40%는 농촌을 떠났다고 한다. 그것으로 우리 농업·농촌에

농업·농촌의 희망과 진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이며, 그것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지,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앞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성공사례와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갖게 됨으로써 살아남은 소수의 사례들이다. 그 과정에서 사라진 다수의 탈락자는, 그들의 고통과 눈물은 아يا기거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프랭클이 간파했던 핵심은 어떤 행동양식의 군상이든 혼자서, 남과의 경쟁에서 이김으로써 살아남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협동·협력 통해서 공포와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중국 쓰촨성과 일본 코베 대지진 사태, 태안반도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 등의 재해를 이겨내는 데 협력 말고 다른 어떤 방법이 있었는가.

여건이 어려울수록 서로 다투는 일이 많다. 그러나 다투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다.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에서 찾는 게 어떨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이우룡



필자는 4년제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가끔 국민이 바라는 이상적인 형사재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고민해 본다.

자유롭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제적 진실이 규명되고 신속하게 이뤄지는 재판, 유죄인 피고인에 대해 그에 합당한 형벌이 가해지고 억울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무고함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재판이 이상적인 재판에 걸맞지 않을까.

하지만 막상 형사재판을 해보면 현실적인 장애가 많아 이상적인 재판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좋은 재판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

이루어질 수 있다. 입법자는 공소범죄의 종류, 법정형, 피고인의 태도 등에 따라 신속하게 또는 신중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절차를 정하고 있다.

벌금형이라는 경미한 처벌만이 가능하도록 하되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예정된 약식명령사건, 정식재판정구사건 등은 당초 예정된 바에 따라 적은 시간과 노력만으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역형 등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어 신중하게 처리되도록 예정된 사건의 재판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정식재판 청구사건의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대해

이상적 형사재판

건마다 적절하게 재판할 시간이 허용돼야 하고, 특히 법정에서 판사와 재판관 연자가 대면하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 받지 못한다.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재판관을 진행하는 법정의 수에 비해 재판해야 할 사건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재판 시간의 확보는 근본적으로 재판해야 할 사건 수의 감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은 재판 당사자는 재판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정도가 하루빨리 조성돼야 한다.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졌음에도,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 상고를 하고, 나아가 재판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증인 또는 피해자를 위증죄나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재판을 끊임없이 계속하며, 확대 재생산하는 실태는 개선돼야 한다.

재판시간의 확보는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시스템에 순응하는 것에 의해서도

지나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정작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다른 사건의 재판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다음으로 법정에서 거짓진술은 지양돼야 한다. 법정에서의 거짓진술은 증인의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돼 중하게 처벌되고, 피고인의 경우에도 그 작성, 재판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데에 참고가 돼 형벌이 엄해지는 원인이 된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재판을 꿈꾸면서도, 좋은 재판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등한시하는 것 같다. 법원은 인적, 물적 시설을 확충하고 재판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적 토대를 제공하고, 재판 당사자는 양심과 진실을 기조해서 성실하게 재판에 응하고 공정한 재판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이 받쳐질 때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재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입 전형료 전용 만연...대학들 입시장사 하나

비싼 대학입시 전형료가 입시목적 외에 다른데로 전용돼 반추고 원성을 사고 있다. 수험생이 2~3군데 시험을 치르게 되면 전형료만 해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특히 지방 수험생들의 경우 서울에 갔다 왔다 하면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이 들어간다.

일부 대학에서는 오케스트라 티켓구입과 테니스대회 개최, 난방시설 공사나 개인용 컴퓨터 구입, 건물 공사비로 전용하기도 한

다니 말문이 막힌다. 심지어 고교 교사 해외 연수비, 고교 장학금 출원, 수능 성적 우수자 해외연수비 등으로도 지출한다니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마치 대학들이 입시장사를 하는 인상을 주므로 이제 교육부가 나서 전형료 관리에 나서야 한다. 당장 전형료 폐지는 아니더라도 철저한 원가실사를 하여 최소한의 전형료만 부과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거나 행정지도를 펼쳐야 한다.

▲우도형·광주시 평산구 송정1동

기고

나도 팔



해남은 전형적인 농업군이다. 군토(郡土)는 황토땅이요, 바다는 오염되지 않는 청정해역을 가진 축복받은 땅이다. 3면이 바다인 해남의 해변문화는 한반도의 모든 문화영역에서 볼 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원시시대의 첫 출발을 가능케하는 시작의 땅이다.

광활한 농업문화에서 이제 새로운 블루오션인 관광레저문화를 해남에서 꽃피울 'J프로젝트'를 보며, '처음처럼'이란 말을 요즘 되새기고 있다.

3년전 'J프로젝트'는 농경문화에 있어 있는 순박한 주민들의 가슴을 열리게 하며 화려하게 출발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심'의 무산, '상징 보류', '재동, 불투명' 등의 말들만 무성하게 언론

J프로젝트를 처음처럼

에 오르내리고 있어 지역민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다.

사업비 3조2천억원, 사업면적 87.9km², 계획인구 12만 5천명의 거대한 국책사업을 갑작스럽게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내세워 답보상태에 머물게 하고 표류하게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참여정부 때 이미 타당성 조사와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대내외에 천명한 국책사업임에도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려가며 중앙과 지자체간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주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부적절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도시 개발은 그동안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이 지역 미래 문명을 좌우할 중차대한 프로젝트이며 반드시 성공해야 할 사업으로, 주민들도 이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농수산업 소득에 의존해 왔던 지역민들은 최근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극복하고 산

농촌 도둑 활개...경찰, 강력 단속 펼쳐야

바둑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실감난다. 농촌에 돌아다니는 개는 물론 집에서 묶어두는 개마저 전문적으로 포획해서 팔아먹는 절도범들이 활개친다니 분통이 터진다.

얼마전 고흥에서는 기르던 개 5마리중 3마리를 끌고간 사건이 생겨 마을 사람들이 크게 충격을 받았다. 절도범들은 사람들이 감장을 배추와 무를 수확하던 나간 사이 농가에 들어가 개들을 끌고 갔다고 한다.

그렇다고 일할때마다 개를 데리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니 참 답답하다. 고향이기는 아니지만 작년 여름에는 전북의 한 농가에 집입한 절도범이 아직 눈도 채 뜨지 않은 새끼강아지와 어미견을 훔쳐간 사건이 있었다.

농촌에는 젊은이가 없고 인적이 드물다. 이를 이용해 부업으로 키우는 개 절도사건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 농민들 스스로도 더 조심하고 경찰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하길 바란다.

▲윤현수·순천시 안동동

시설

광역경제권 '호남 민심' 제대로 수렴하라

호남권의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계획서 제출 거부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가 지난달 10일 광역경제권 정부의 구상대로 추진되면 수도권 및 영남권과 호남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며 계획서 제출을 거부한 지 오늘로 45일째다. 경제위기로 버려진 선 지역경제를 살리려던 공공부문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방 프로젝트'는 계획조차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장기화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가 광역경제권의 문제점은 주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부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균발위는 당초 호남권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광역경제권 구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다른 권역에서도 반발이 일자 선도산업을 재조정할 수 있다며 어정정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도 호남권 5개 선도산업에 영남권 10개 산업보다 15조원이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도 안 되는 자료를 내놓는 등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

정부는 밀어붙이면 된다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 단계에서 지방의 반발을 수습하려면 지역간 불균형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수도권, 영남권과 최소한 비슷한 지점에서 출발하게 해달라는 호남의 주장을 들어달라는 얘기다. 같은 경제권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공동협력사업부터 우선 시작하도록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식경제부 차관이 오늘 광주와 전남을 방문한다. 시·도지사, 상공인, 언론인 등을 만나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설득하려 하지 말고 호남의 민심을 제대로 살펴 정부 정책이 반영하는 기회로 삼기를 주문한다.

사립대 내년 등록금 '동결' 바람직하다

내년도 상당수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인상폭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한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내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는 등 적극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대학 등록금 인상이 우리 사회의 현안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사립대 스스로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총장협의회는 말처럼 모든 사립대가 이같은 입장에 동조하고 나설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이 커진만큼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등록금 동결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등록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다. 대학들이 해마다 등록금을 경쟁하듯 올려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을 사왔다. 일부 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불가항력의 3배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등록금 '1천만원 시대'가 결코 낯익은 일이 아닌 것이다.

경제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심각하다.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물가와 금리는 치솟아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실립살이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재단의 전입금이 쥐꼬리 수준에 그치고 학교 예산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이 적지 않다. 내년에는 치열한 등록금 투쟁이 예고돼 있다. 대학총학생회 등은 등록금 문제를 최대의 현안으로 꼽아 이사회화할 태세다. 이런 마당에 등록금을 인상해선 학내 분규는 피할 수 없다.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사학재단 재정에 대한 감시 강화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고 국·공립대로 확산시키는 조치를 내리야 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 인하와 등록금 후불제 정비 등도 있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현실을 제대로 분석·예측해 해결책을 내놓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중이던 1999년 12월, 국내 경제학자들이 집단 반성문을 내놓았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다. 경제대추환자를 미리 예측한 경우는 역사적으로 드물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예측한 경제학자는 거의 없었다.

토마스 칼라일은 경제학을 일컬어 '우울한 과학'(Dismal Sciences)이라고 했다. 복잡한 변수 때문에 학문적 전망이 틀어맞기 힘든 경제학의 비극을 갈파한 말이다.

경제의 불가측성을 감안해볼 때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국경제를 예측한 '미네르바'란 필름의 사이버 논객을 둘러싼 신드롬이다. 미네르바는 인터넷에서 이미 '경제대통령'이자, '선지자' '교주'로 통한다. 미네르바는 리먼브러더스 파산, 주식시장 폭락, 환율 급등, 한·미통화 스와프 등을 예측하면서 정부의 무능을 비웃었다. '코스피 500 추락, 집값 반토막' 전

망도 내놓았다. 미네르바 현상의 책임은 역설적이지만 정부에 있다. 정부 각료가 국회에서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 의지를 과감하고 신상 추적설까지 떠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승리했을까. 천만의 말씀, 정부의 완패였다.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 결과 '정부를 믿는다'는 답은 6%에 불과한 반면, '미네르바를 믿는다'는 73%에 달했다.

미네르바 신드롬을 보며 '카산드라의 저주'가 생각난다. 그리스 신화의 여주인공 카산드라는 아폴론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예언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예언력과 함께 불행한

게도 아무도 그녀의 예언을 믿지않는 저주 또한 씌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관료들에게도 카산드라의 저주가 씌어진 듯하다. 시장은 이들의 희망 또는 전망을 믿지 않고 정변대의 길을 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미네르바에 대해 시기를 느낄만도 하다. /우주승 시화1부장 jsh@

미네르바 신드롬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光주시가1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사 회 1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